



# 통상 이슈브리프

2025.04.04

## 美 4/2 관세조치(상호관세) 주요 내용

통상연구실, 워싱턴지부

### I 행정명령 주요 내용

-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
- (관세율) 한국(25%)을 포함한 57개국(부속서 I)에 국가별로 설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10% 보편관세를 부과
  -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 (한국은 35%(10%p+25%p)가 아니라 25%만 부과)

#### <주요국 대상 부과 상호관세율>

베트남	중국	대만	인니	인도	한국	일본	EU	이스라엘
46%	34%	32%	32%	26%	25%	24%	20%	17%

- 미국産 비중이 20% 이상인 품목은 해당 미국産 가치에 대해 관세 면제

#### (참고) 상호관세 계산 방법

- USTR는 상호관세를 '미국과 각 무역 파트너 간의 양자 무역 적자를 균형잡는데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
- 상호관세는 0~99%이며 단순평균 상호관세율은 20%, 가중평균 상호관세율은 41%로 나타남

$$\Delta \tau_i = \frac{x_i - m_i}{\epsilon^* \varphi^* m_i}$$

$\tau_i$  : 미국이  $i$ 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Delta \tau_i$  : 관세율의 변화  
 $x_i > 0$  : 미국의  $i$ 국에 대한 수출액  
 $m_i > 0$  : 미국의  $i$ 국으로부터 수입액  
 $\epsilon < 0$  :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매개변수 값: 4)  
 $\varphi > 0$  : 관세가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비율 (매개변수 값: 0.25)

자료: USTR

주: '부속서 I'에 발표된 국별 상호관세는 위 산식을 통해 도출된 세율의 50% 수준

- (시행일) 보편관세는 4/5부터, 상호관세는 4/9부터 시행되며, 상호관세 부과국에도 상호관세 부과전까지 보편관세 부과
  - (한국) 4/5-8 10%, 4/9부터 25%의 관세 부과
- (제외 품목) 부속서II에 기재된 일부 품목은 금번 관세조치(상호관세·보편관세) 적용 제외
  -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既적용), ▲구리, 목재(조사 中)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품목은 제외(해당 품목은 232조 관세만 적용. 예컨대 한국산 자동차는 232조 관세 25%와 한국 상호관세 25%를 합친 50% 관세가 아니라 232조 관세 25%만 적용)
  - 아직 어떠한 관세조치 대상이 아니나 관세부과를 시사한 반도체, 의약품 등도 제외 대상이어서 향후 품목별 관세조치로 활용되고 있는 232조 관세 대상 가능성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 \* (구리) 동관, 동박, 동선 등 파생제품 포함 89개 품목, 당초 우려했던 전선·케이블은 현재 불포함 (반도체) HS 8541, 8542 하위 16개 품목 등 (미국 HTS 8단위 기준)
- 보복조치 도입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호적인 무역관행을 개선할 경우에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
- 캐나다, 멕시코는 금번 관세조치(상호관세·보편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경 문제(마약)를 이유로 이미 25%의 IEEPA 관세를 부과 중
    - USMCA 요건 미충족 품목에 25%, 캐나다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
    - 국경 관련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IEEPA 관세 조치 종료 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USMCA 요건 미충족 품목에 12%, ▲충족 품목에 0%의 관세로 대체
- 중국에 대한 소액면세제도를<sup>1)</sup> 폐지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관 절차가 마련되면 폐지 예정
  - 중국산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어 5/2부터 관세 부과
    - 기존 혜택을 받던 물품에 대해 30% 혹은 품목당 \$25 관세 적용(6/1 이후 품목당 \$50로 인상)

1) 관세법 321조(Section 321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의거하여 미국내 수입자의 수입품 일일 가치가 \$800 이하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화된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 II 현지 및 주요국 반응

### □ (미국 산업계) 고율 관세 발표에 엇갈린 반응을 보임

- (미국제조업연합\*) 스콧 폴(Scott Paul) 회장은 관세 부과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관세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

\*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 (전미제조업협회\*) 제이 티몬스(Jay Timmons) 회장은 “새로운 관세는 투자와 일자리, 공급망을 위협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일부 원자재에 대해 무관세 수입 허용을 주장

\*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미국상공회의소) 닐 브래들리(Neil Bradley) 수석 부회장은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세금 인상”이라고 비판

### □ (美 의회) 상원, IEEPA 기반 對캐나다 관세 종료 결의안 승인(4/2)

- (결의안 내용) IEEPA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종료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된 캐나다산 제품(25%) 및 에너지(10%)에 대한 관세 철폐

- (투표 결과) 상원은 51대 48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관세 및 에너지에 대한 관세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통과

— 민주당 의원 전원(47명)과 함께 공화당 소속 의원 4명(랜드 폴(켄터키), 미치 맥코넬(켄터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수잔 콜린스(메릴랜드))이 합류

- (전망) 양원 공동결의안으로 하원에서도 가결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공화당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 크지 않음(앞서 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캐나다·멕시코 관련 결의안은 표결에 이르지 못함)

### □ 입법·사법부가 법에 따라 대통령의 IEEPA 조치 제한에 나설 가능성 있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음

- 의회는 양원 공동결의를 통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음

— 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조치가 행정권을 남용하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및 농업 부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비판<sup>2)</sup>

— (과거 사례) 국가비상사태법(NEA)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국가비상사태 종료 공동결의안이 의회에서 발의되었고, 그 중 1건만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미행사로 발효<sup>3)</sup>

- 기업이나 산업단체 등 미국 시민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제재에 사용되던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가능 여부가 연방법원 판단의 쟁점<sup>4)</sup>

2) Hannah Monicken(2025.2.5.), "Democrats blast 'arbitrary' tariff plans while key Republicans stay quiet," Inside U.S. Trade.

3) CRS(2025.2.3.), "National Emergencies Act: Expedited Procedures in the House and Senate", CRS.

4) Ari Hawkins(2025.2.2.), "Are Trump's new tariffs legal? It may not matter," Politico.

- 연방법원이 판결 전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릴 경우,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관세조치의 효력이 잠정 중단될 수 있음
- **(과거 사례)**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IEEPA와 유사한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근거로 보편관세를 시행하자 수입업체들이 대통령의 권한 부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동 법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sup>5)</sup>

#### (참고) 관세조치 및 법적 대응 근거

- 관세조치의 법적 근거인 IEEPA는 비전시(非戰時) 비상상황 발생 시 대통령에게 국제금융규제, 외국인 자산·거래 규제 등의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1976년 국가긴급상황법 (National Emergency Act, NEA)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선행되어야 함
- 연방의회는 양원 ‘공동결의(Joint Resolution)’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함으로써 관세조치 종료권 행사 가능
  - 단, 공동결의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2/3 찬성으로 재결의 가능

#### □ (주요국) 부정적 입장 표명 및 세부 대응 계획 준비 중

- **(EU)**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며 불확실성은 악순환을 일으키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 관세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캐나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important elements) 보존하였지만 펜타닐·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대응조치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G7 중 가장 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
  - 철강, 알루미늄 등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 밝히며 추후 세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
  - 미국산 수입차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4/3)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57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수입이 예상됨<sup>6)</sup>
- **(멕시코)** 관세 보복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 **(중국)**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무역전쟁에는 승자는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5) Christopher A. Casey(2025.2.3.),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NEA), and Tariffs: Historical Background and Ke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6) Mathieu Dion and Brian Platt(2025.4.4.), “Canada Hits US Autos With Tariffs, Mirroring Trump’s Move”, Bloomberg.

**[붙임]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목록** (4/9 발효, 상호관세율 기준 내림차순)

No.	국가	상호관세	No.	국가	상호관세
1	레소토	50%	30	나우루	30%
2	캄보디아	49%	31	파키스탄	29%
3	라오스	48%	32	튀니지	28%
4	마다가스카르	47%	33	인도	26%
5	베트남	46%	34	카자흐스탄	27%
6	미얀마	44%	35	<b>한국</b>	<b>25%</b>
7	스리랑카	44%	36	브루나이	24%
8	포클랜드 제도	41%	37	일본	24%
9	시리아	41%	38	말레이시아	24%
10	모리셔스	40%	39	바누아투	22%
11	이라크	39%	40	코트디부아르	21%
12	보츠와나	37%	41	나미비아	21%
13	가이아나	38%	42	EU	20%
14	세르비아	37%	43	요르단	20%
15	방글라데시	37%	44	니카라과	18%
16	리히텐슈타인	37%	45	말라위	17%
17	태국	36%	46	필리핀	17%
18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35%	47	짐바브웨	18%
19	중국	34%	48	이스라엘	17%
20	북마케도니아	33%	49	잠비아	17%
21	앙골라	32%	50	모잠비크	16%
22	피지	32%	51	노르웨이	15%
23	인도네시아	32%	52	베네수엘라	15%
24	스위스	31%	53	나이지리아	14%
25	대만	32%	54	차드	13%
26	리비아	31%	55	적도기니	13%
27	몰도바	31%	56	카메룬	11%
28	남아프리카	30%	57	콩고민주공화국	11%
29	알제리아	30%	출처: 백약관		